

2017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성재민*

지난 연말 전망과는 달리 2017년 들어 정치적 혼란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해외의 나아진 경제여건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으로 올수록 각 전망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꾸준히 높아져 왔고, 한국은행도 지난 7월에 연초의 전망보다 0.3%p 높은 2.8% 전망을 내놓았다.

취업자 수도 2017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6만 3천 명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도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아도 경기개선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지난해 말보다 다소 회복된 가운데, 건설업 고용증가 영향으로 일용직 증가폭도 커졌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크게 증가했던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증가는 구조조정과 경기둔화에 따른 임금 근로 일자리 위축에 따라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현상이다.

업종별로 보면,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제조업은 2017년 들어 감소폭을 줄이면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건설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 활성화에 따른 호황이 지속되면서 2016년 7월 이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어 왔다. 건설업 호황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거래가 활발해 부동산업에서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교육,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102천 명 증가), 40대 이상(76천 명 증가) 위주로 몇 년째 꾸준한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소매업 위주의 고용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업종들 중에 올 상반기 들어 고용이 안 좋았던 업종들도 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 상반기 94천 명에서 2017년 상반기 33천 명으로 둔화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용이 증가해왔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서도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으로 고용증가폭이 둔화되기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m@kli.re.kr).

나 감소했다.

이상과 같은 2017년 상반기 업종별 고용동향은 수출 호전, 새 정부 출범에 기인하는 경기 호전 기대감과 함께,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내수 경기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아도 20대를 제외하면 고용률이 증가해 노동시장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아직까지 신규채용이 활발해지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관계로 20대 고용률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느려지면서 30대 초반도 연장된 노동시장 진입연령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남성과 미혼 여성 고용률은 20대와 동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기혼 여성 고용률은 늦은 출산과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를테면, 30대 초반(30~34세) 기혼 여성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늦은 출산의 영향으로 30대 후반(35~39세) 기혼 여성 고용률은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 40대 초반(40~44세) 기혼 여성 고용률은 지난 몇 년간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30대 초반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상반기에도 상승했으며, 30대 후반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2년 연속 상승했고, 40대 초반 기혼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자녀 유무가 공표되지 않아 30대 후반 기혼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자녀 없는 여성의 증가 때문인지, 자녀가 있음에도 경력단절 대신 경제활동 지속을 택한 여성의 증가 때문인지 구별할 수는 없으나, 충분히 주목해서 볼만한 흐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하반기에는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과 수출의 호조세 지속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노동시장의 여건도 개선되어 갈 것이다. 연구원에서는 2017년 월평균 30만 명 중후반대의 일자리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역시 노동시장 개선 흐름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기개선세가 강하지 않고 수출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노동시장의 개선 흐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이 실현되더라도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변화와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더해, OECD 최고 수준의 저임금 고용, 비정규직 비중 및 사회보험도 안 되는 400만 남짓의 비공식 일자리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더라도 가구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적 현상인 높은 영세자 영업 비중도 지속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출의 낙수효과는 약화된 지 오래이나 이를 대체할 내수기반 확충, 분배의 개선 등 대안적인 방향으로의 이동은 지체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가 커 미래 비전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5~64세 인구의 감소가 눈앞의 현실이지만 사오정이란 말이 보여주듯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른 밀려남도 여전한 현실이며,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 개선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새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메뉴를 내놓고 있다. 이미 확정된 것처럼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며, 근로시간 제도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지침이 이미 발표되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생명·안전분야를 비롯 상시적인 일자리의 정규직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중소기업 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바빠 움직이고 있으며, 협력이윤 공유제 같은 새로운 정책 대안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일자리 양의 증가와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 정책도 발표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장관급부터 30% 할당 공약을 지키는 등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가되고 있다.

각 정책 하나하나마다 속도와 수준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기존의 경제운영 방향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자체는 폭넓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미 최저임금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있듯이 지원 대책이 충실히 입안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확정안이나 방향이 발표된 위와 같은 정책들에 더해 4차 산업혁명과 중국 제조업의 성장 등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회안전망의 발본적 강화대책이 추가된다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1987년 7, 8, 9월 대투쟁』 30주년이다.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용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노사관계 제도와 행태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노동리뷰 2017년 7월호에 이어 8월호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사관계 측면의 개선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제안하는 특집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과제는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들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프로그램 역시 오래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인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진일보시키거나 재원 부족이나 이익집단의 반대, 공감대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정책들이다. 방향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만큼, 충실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통해 제대로 일보를 디디야 하겠다. **KLI**